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체제의 재구조화, 동북아시아 공통의 고민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산업과 고용은 동전의 양면이다. 고용은 산업의 부흥을 통해 팽창하고, 산업이 쇠퇴하면 고용도 쇠퇴하기 마련이다. 특정 산업은 새로운 산업을 통해 대체됨으로써 쇠퇴곤 한다. 그때마다 사회는 고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의 전환에 비해 고용의 전환은 쉽지 않고, 민감하고 정치적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먹고살아가는 준엄한 수단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정부들은 산업의 전환과 고용의 전환이 최대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지만 둘의 관계는 매우 자주 불협화음을 내고 마찰을 빚곤 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북아노동포럼'이라는 장(場)이 있다.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노동정책 전문 연구기관들이 친선교류 차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여기에는 한국 측을 대표하여 한국노동연구원, 중국 측을 대표하여 중국 노동보장과학연구원(CALSS), 그리고 일본 측을 대표하여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가 참가한다. 세 나라가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이 행사의 올해 개최지는 중국이었다. 지난 2015년 11월 19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13차 포럼에는 세 기관의 연구자들과 관계자들 약 30여 명이 참석, 동북아시아 노동문제의 현안을 놓고 열띤 발표와 토론을 전개했다.

올해 이 포럼의 주제는 "산업 구조조정 중의 고용문제 및 정책과제"였다. 이는 이번 행사의 주최 측인 CALSS가 주도적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 주제에는 사실 당장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치 아래 개방개혁을 도모한 지 벌써 20~3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비효율적인 기업,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식은 경제의 여러 영역들에서 잔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과잉설비 투자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면서 인력의 조정과 이동을 합리적으로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중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국가주도의 성장모델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발전시킨 동북아시아의 이웃국 일본과 한국 모두 유사한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이른바 고도성장기를 보내고 나서, 60년대와 70년대에 구조적 불황의 시대를 맞이했고, 80년대부터 특정 업종들을 정리해가면서 골치 아픈 고용조정의 과제를 감당해야 했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서비스 경제의 부상을 경험하면서, 전략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전개해 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주지하듯이, 개발독재 시기를 통해 크게 성장한 제조업과 공기업 모두 90년대에 들어 부실과 비효율의 양상을 표출했고, 그 시기부터 꾸준히 구조조정의 시도를 전개했다. 그리고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산업과 고용의 대수술을 단행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 들어서는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과 고용형태의 분화를 겪으면서, 저임금 서비스 직종 노동권의 심한 훼손을 경험하고 있고, 아웃소싱의 관행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확산되어 일자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에서는 13차 동북아노동포럼에서 발표된 세 편의 논문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중국 측의 발표논문 2편과 일본 측의 발표논문 1편이 그것이다.

황상민은 중국이 당면한 설비과잉 문제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단행해야 할 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그 속에서 불가피하게 전개될 고용구조의 재구조화 과제를 다루었다. 중국의 다양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험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저자는 중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력의 전환과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 중국의 상황과 고민을 잘 읽을 수 있는 글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도 그렇게 정치하지는 못하지만, 그 역시 현재 중국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모퉁은 산업구조의 변동과 그 과정에서의 구조조정이 현재 중국의 대졸 창업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대졸 취업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형국을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한 일자리의 만족도가 낮고 매칭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양상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평하고 자유로운 취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정책의 개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는 한국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대졸자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중국 자본주의의 산업적 고도화 속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을 암시한다.

일본의 최근의 상황을 분석한 후지모토 마코토는 제조업 부문의 사업혁신,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인적자원 개발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신규사업 부문의 발전과 신기술 도입 간의 다양한 관계를 분석하면서 다양한 경우들에서 어떻게 인적자원 개발의 과제들이 대두하는지 세분하여 접근한 점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제기한다. 분석결과가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현재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는 일본의 고민과 그 속에서의 인력개발의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글이다.

동북아시아의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 산업변동과 고용정책에 대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일정하게 자극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두 나라의 자본주의와 고용체제의 변동은 동북아시아의 경제질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나라 모두 뚜렷한 해법을 명확히 제시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문제를 바라보며 답을 찾기 위해 발을 구르고 머리를 싸매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때에 한국이 산업혁신과 고용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잘 잡는다면 향후 동아시아의 경제질서에서 우위를 점해 나가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관계자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KLI**